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이상철 과장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양돈산업을 참으로 어렵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질병, 분뇨문제, FTA, 돈가하락 등에 노심초사하다가 업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사료값 인상이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것 같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이 최선의 방어라고 한다. 이것에는 종돈·정액의 올바른 선택, PMWS, PRRS 등 질병 및 폐사율 감소, 시설 및 사양환경 개선, 가축분뇨처리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여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양돈 T/F팀을 가동하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축분뇨처리 무엇이 문제인가

위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과제 중 가장 신속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한 것이 가축분뇨라고 생각한다. 단,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일부농가에서는 우리는 생산에만 전념할 테니 분뇨는 정부가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농가가 있어 안타깝다. 현재는 서로가 힘을 합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도 그동안의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일정부분 비난 받을 부분은 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93년부터 지금까지 1조 1천억원 이상을 지원해 왔는데도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농가가 있으니 말이다.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부각된 것은 공교롭게도 돈가가 좋은 시기에 해양매출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가축분뇨처리에 골치를 썩이는 대신 값싸고 손쉬운 해결수단을 이용하다 런던협약 발효 시점에 맞추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매출 감축 정책을 발표하니 갑자기 난감해진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그동안 해

양배출에 익숙해지면서 마리수를 늘려왔던 농가에서 집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필자는 2005년 9월 자연순환농업팀장을 맡으면서 양돈농가를 볼 때 마다 앞으로 해양배출 농가는 FTA 발효 이전에 가축분뇨 때문에 큰 낭패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해 왔다. 한편으로는 이 어려움을 알고 있는 정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와 같은 단순 지원방식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는 가지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가동하면서 분뇨처리를 잘 해결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힘은 들지만 활성오니법을 채택하여 정화방류로 해결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처리 가능물량 이상의 마리수를 확보하고 있었던 농가는 자연순환농업에 동참하여 액비살포를 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다.

자연순환농업 동참에 감사하며

정부가 2006년 9월에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을 수립·발표한 이유는 전세계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이 가장 많은 나라중의 하나인 우리가 국민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유기질 자원이 가축분뇨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의 인식 및 노력부족으로 자원화가 잘 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서로 협력하는 일종의 운동을 전개하여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액비유통센터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동안 지원한 액비저장조도 활용도가 낮았으나, 그동안 토론회, 심포지엄, 지역순회 교육, 포럼, 전문지 광고 등 다양한 교육·홍보를 통해 농가들의 의식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전국적으로 액비의 품질이 개선되면서 액비살포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경종농가의 요구에 비해 액비량이 적어 공급에 쪼들 때는 경우도 있다. 이는 축산조직에서 자연순환농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된 품질의 퇴비와 액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해 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농축협 등 축산·경종조직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2007년 현재 39군데에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협약 참여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선도조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양돈협회에서도 그동안 수도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종농가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자연순환농업의 확산에 노력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양질의 퇴액비 유통에 힘써 준 농가, 법인, 조합,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해양배출 감축대책에 대응

이러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시책으로 운용했던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이와 동시에 해양배출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우리부는 2011년 말까지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제로화 하는 감축대책을 2007년 6월에 발표하였다. 대책의 골지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2011년까지 70개소로 확충하고, 액비유통센터를 140개소를 지정하며, 액비저장조를 매년 800개 이상씩 지원하되 액비유통센터 위주로 지원해 나가는 등 양질의 퇴액비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해양배출 물량을 매년 50만톤 이상 감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자금지원 및 사후관리에 치중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양배출 농가가 있는 시군은 자체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수립해 나가게끔 하고 우리부는 시군의 계획을 점점 조정해 나가면서 감축에 노력해 나가는 시군에 대해 정책자금을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법 시행에 즈음하여

작년 9월 28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제정 법률의 특징은 그동안 가축분뇨를 폐수로 취급해 오던 것을 자원화 개념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용을 촉진케 한 것이 큰 실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축산농가는 퇴액비 저장 및 살포관련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큰 틀에서 환경부와 규제 완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법에서는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지속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환경친화 축산농장을 지정토록 하였다. 금년 초에 보다 구체화된 기준 즉, 축산업 등록기준 이하로 가축사육의 밀도를 유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 조정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 등을 명시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을 고시하였고, 지정된 농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확보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마무리

전년도 해양배출량이 202만톤으로 2006년 261만톤에 비해 59만톤이 감축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되리라 전망하지만 우리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감축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분뇨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던 농가도 있고, 노력중인 농가도 있을 것이며, 아직도 정부타령을 하는 농가가 있을 지도 모른다. 분뇨처리에 노력하는 농가는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면서 무한정쟁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농가일 것이며 정부는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적어도 2011년까지 모든 농가가 해양배출에 자유롭고 농업 농촌에 필요한 유기질 자원을 제공해주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양도**